

최종보고서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조사 연구용역

2024. 9.

提 出 文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5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
조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9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시욱

< 요약 >

1. 행사 개요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최 계획

- 개최 시기 : 2025년 9월 10일 ~ 9월 12일(3일간)
- 개최 장소 : 부산시 벡스코 (잠정)
- 주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및 관계부처
- 주무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가 규모 : 40개국 참관객 22,000명(내국인 20,000명 및 외국인 2,000명)
- 주제: 미정 (2025APEC정상회의 등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24.11월 전후 결정)
- 소요 예산 : 29.9억 원(전액 국비)
- 주요 행사 : 사전행사, 개막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등

□ 개최 목적

- 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 선도
- 탄소중립 관련 산업계 역동적 대응 공유
- 국제적 논의의 장 마련을 통한 기후산업 선도 및 신시장 창출

□ 기대효과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 탄소중립 이슈화 주도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 선도
- 비즈니스 교류 증진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탄소중립 기술·제품 전시, 수출 상담 등 비즈니스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한 기업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기업 국제 경쟁력 향상
 - 기후위기 대응 선도 국가·기업 등의 정책·기술 공유로 산업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 2023년 1차 행사 개최 및 2024년 행사 추진을 통해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 행사의 기본 틀을 유지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내용
1. 사전행사		주요 인사 환영 리셉션
2. 개막행사		개회사 · 환영사 · 기조연설 등 기후에너지혁신상 시상
3. 컨퍼런스	CFE 비즈니스 서밋	IEA 공동 세션
		비즈니스 리더 라운드테이블
		ESG 세션
	디지털 기후 서밋	디지털 기후 혁신 세션
		녹색금융 세션
		에너지 AI 포럼
	산업·기술 서밋	탄소중립 기술 세션
		기상기후 기술 세션
		미래 기후산업포럼
4. 전시회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미래모빌리티관, 기상기후산업관, 환경에너지산업관
5. 부대 행사		청정수소 국제포럼, CCUS 기술 워크숍, 공공기관 취업설명회, GGHK 상담회 등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4. 7.),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정책성 등급 조사 3차 질의답변서」, p. 4.

2. 정책성 분석

가. 행사 개최의 공익성

① 국익과 공익 기여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국제적 논의의 장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과 IEA의 공동 개최로 국제 논의의 장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 관심도 및 인지도 제고
 -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산업박람회로 기후 관련 산업계 네트워킹 강화 및 정보교류 촉진
- 박람회를 계기로 탄소중립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양·다자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할 것으로 기대
- KIEP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행사 목적의 국익·공익적 기여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 응답자는 기후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국제적 논의의 기회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 등 2개 행사 목적에 대해 63.8~65.3% 긍정으로 답변
 - 또한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 탄소중립 기술·제품 전시, 수출 상당 등 비즈니스 증진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산업계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향상 △ 국가 브랜드 가치의 제고 등 기대효과에 대해 60.6%~67.9% 긍정으로 답변

② 개최 목적 달성 가능성

- '23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이후 3번째 진행되는 행사로 개최 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 개최행사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 사업 프로그램은 사전행사, 개막/부대행사, 청정에너지, 산업·기술, 기후·자원 등 부문별 컨퍼런스, 무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기상기후 등 전시회로 구성
- KIEP가 실시한 전 국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동 박람회 프로그램이 개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45.2%~66.3%)

③ 주무부처 정책과의 연계성

- 본 행사 개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명시된 부처 핵심 추진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2024년 업무 추진의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공급망과 경제 안보 확립, 지역경제 및 투자활성화 등을 6대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무탄소에너지원별 공급 역량 강화, 에너지 효율 혁신 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별로 선정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음.
-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에너지와 산업 공정이 2020년 기준 각각 86.8%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에너지와 산업 공정에 관여하는 주무부처로서 탄소중립 및 기후산업 육성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됨.

④ 주관기관 중장기 정책과의 연계성

- 행사에 관여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관계부처는 모두 기후 산업과 연관된 주무 부서로서, 정부의 주요 중장기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정부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연도 배출(727.6 백만톤) 대비 40%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처음 천명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 제정(2022년 3월 시행)하였음.
- 또한 2023년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통해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정부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서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2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나. 행사 계획의 우수성

㉠ 행사 계획 실현 가능성

- 주관기관의 유사 행사 개최 경험,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동 개최 계획을 고려할 때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행사 계획 실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교적 높을 것으로 판단
- 본 행사는 국내에서 다년간 개최된 탄소중립 관련 행사(에너지대전, 탄소중립 EXPO, GGHK 등)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연속성 보유
-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행사, 개막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등으로 일관된 형태를 유지 중
-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주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 국제행사(IREC 등) 개최 경험 보유
- 2024년 행사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동 개최가 확정(2024. 4. 4.)되었으며, 이를 정례화하여 추진할 예정

② 개최시점 적절성/필요성/중복성

- 개최시점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1월) 전인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유사한 시점에 개최되는 국제행사(UN총회 및 뉴욕기후주간 등) 일정을 감안할 필요
 - KIEP 설문조사('24.6.) 결과 응답자(1,000명) 중 82.3%가 2025년 개최가 '적절하다'고 응답
 - 매년 9월 셋째 주에 유엔총회 및 뉴욕기후주일이 개최되며, 지역별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등이 유사한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 본 행사는 탄소중립 및 기후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국제기구가 함께 추진하는 건으로 특정 기관이 이를 대체하여 동종 유사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주관기관이 범부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 준비현황 점검 회의, 부산시와의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총괄 회의 외에도 각 협력 기관과 진행 사항을 점검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위상과 유사 국제산업박람회 개최 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행사와의 중복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

③ 내외국인 유치 현실성

- 주관기관은 총 22,000명(외국인 2,000명/40개국, 내국인 20,000명)의 참석자 유치를 계획하였는데, 2023년 본 행사 개최 실적을 고려할 때 내외국인 유치계획이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 2023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총 28,732명(외국인: 1,854명/52개국, 내국인: 26,878명) 유치에 성공
 - 다만 외국기업 유치 목표(40개)의 경우 기존 실적(22개, 2023년)에 비해 2배 정도 상향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유치 방안 마련 필요

4] 홍보 적절성

- 주관기관은 기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별/매체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외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을 위한 세부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대상별) 공공 부문(정부 부처, 공공기관), 해외 관계자, 지역 및 일반 참관객, 전시회 방문 참관객별 홍보 전략과 방법 수립
 - (매체별) 온·오프라인, 언론홍보, 시민참여 및 기관협조를 통해 본 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행사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 현재의 홍보 계획은 추진 일정을 4~9월 및 수시로 구분하고 있으나, 누가 언제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 국제산업박람회로서 외국인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시에 홍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

5] 과거 주관기관 유사 행사 경험 반영

- 본 행사는 유사 행사 개최 경험과 본 행사 추진 사례(2023년)에 기초하여 행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
 - 주관기관이 다년간 개최해 온 국내행사(에너지대전,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등)를 본 행사 프로그램 내에 포함하여 추진
 - 2025년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이 2023년 개최 실적 및 2024년 개최 계획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기존 개최 경험을 반영하였다고 판단
- 다년간의 행사 개최 경험은 주관기관의 개최 역량을 향상시킨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2025년 본 행사 개최 과정에 십분 활용할 필요
- 그러나 기후산업박람회로서 에너지 외 다양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

- 본 행사의 취지에 맞게 기후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이며, 일례로 순환경제 관련 논의 동향('UN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체결 계획 등)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참고로 2024년 9월 개최 건은 주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특성상 다수의 프로그램(CFE 서밋, 미래에너지관, 무탄소에너지관, 무탄소에너지 APEC 워크숍 등)이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

⑥ 시설물 활용 계획 합리성

- 본 행사 개최 장소는 부산 벡스코(BEXCO)로 잠정 결정(2024년 6월 기준)하였으므로 신규 시설물 건축이 없어 시설물 사용계획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다.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① 연계성 및 접근성

-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존 행사 개최 경험 등을 통해 볼 때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
- 주관기관은 “에너지 이용증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 유도”를 설립 목표로 제시하는 등 에너지 및 기후산업 분야와 밀접히 연계
- 한편 주관기관은 2023년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4년 9월 중 제2회 행사 또한 개최 예정
- 부산 벡스코는 국제공항 및 지하철 활용가능성 등 국제행사 개최지로서의 교통 접근성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하며, 주관기관은 주요 광역 교통지를 행사장 및 호텔과 연결하는 수송차량을 운영하는 등 행사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 다만, 현재 교통지원계획이 2023년 행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2025년 행사의 내용·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을 조정 및 구체화할 필요

② 과거 유사 행사 성과 및 인프라 확보

-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등 다수의 탄소중립 유관부처·기관·기업 총괄 경험 및 범부처 통합 행사를 총괄
 - 2023년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탄소중립 EXPO를 공동개최하였으며, 수도권 외 지역 최대 참관자 수인 28,732명이 참여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잠정 개최지로 선정된 부산 벅스코(BEXCO)의 경우 교통 접근성, 컨벤션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국제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한 입지로 평가됨.
 - 벅스코는 1,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을 3개와 1,440명 수용 컨벤션홀 1개를 보유하고 있어 개막행사 등 최대 인원 참여 시설 확보가 가능함.

③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

- 본 행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주관 행사이나, 지자체 주관 컨퍼런스 개최 및 행사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가 중요
 - 실제 부산시는 자체 컨퍼런스 개최 및 전시행사 주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행사 개최지로서 행사 개최 지역 대응 지원, 지역 인력 모집 및 지원, 수송 지원 등 행사 실행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
- 현재 행사 준비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에 주관기관 외에 국조실 및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박람회 준비를 위한 정기·수시 협의를 진행
 - 다만 현재 논의는 주로 올해(2024년)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본 행사(2025년 행사)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

④ 지역주민/기업과의 협의

- 동 박람회는 참관객 참여형 이벤트 진행, 컨퍼런스 및 전시회의 민간 부문 참여, 대한상의와의 협력 등 지역주민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 지역주민 참여가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무탄소 토크 콘서트, 기후위기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참관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
 - 민간 기업 CEO의 컨퍼런스 연사·패널로의 행사 참여, 민간 기업의 전시관 부스 참여 등 민간 부문 또한 행사 개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
- 또한 주관기관은 행사의 홍보 및 현장 운영의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민간 서포터즈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및 코트라와의 협력 등 지역주민·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
 - 다만 아직은 관련 논의가 대부분 올해(2024년)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본 행사(2025년 행사)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
 - 지역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행사 기획단계부터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할 필요

⑤ 지역주민의 지지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24. 6.) 결과,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국내 개최에 대한 지지도는 6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

라.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① 국고지원 불가피성 사유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공익성과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행사 개최를 위한 국고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주관기관은 탄소중립 이행 선도에 본 행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행사 개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컨퍼런스 및 부대 행사에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고 지원 요구 사유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KIEP가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5%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7.5%였음.

② 국고지원 수준 적절성

- 기존 박람회 성격의 유사 행사 및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중앙정부 행사와 비교할 때, 본 행사의 국고지원 요청 규모는 과도하지 않음.
- 지자체에서 2022년 및 2023년 개최를 신청한 박람회 성격의 행사의 총 사업비는 50억 원 이상을 상회하며, 3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가 대부분임.
- 본 행사는 최근 국비 지원을 요청한 중앙정부 주관 국제행사 사례인 2024 유엔공공행정포럼(3일 2,500명 규모, 30억 원 국비 요청),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2일 1,300명 규모, 30억 원 국비)등과 유사한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다만, 비슷한 구성으로 올해 개최 예정인 동일 행사의 소요 예산과 대비하면, 2025년에 요청하는 국비 신청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음.
- 주관기관은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올해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19.9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행사는 해당 소요 예산을 2024년 대비 50% 증가한 29.9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3. 사업비 분석

□ 주관기관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에 제출한 총 사업비 29.9억 원을 계획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컨퍼런스 비용이 1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고, 홍보 및 폐막식 9.9억 원, 사전행사 7.5억 원, 부대행사 2.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2025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계획되었던 2023년 행사와 비교하면 컨퍼런스에서 2억 원 증가하였고, 사전 및 개막행사 1.5억 원, 홍보 및 폐막식 0.5억 원 증가한 반면 부대행사 및 특별행사 비용은 4억 원 감소하였음.

□ 사업비 적정성 검토 기준

- 사업비 적정성 분석은 사업계획예산에 대해 ‘수량 적정성 검토’, ‘세부수행계획 기준에 따른 원가 재산정’, ‘적용단가 적정성 검토’, ‘섭외성 비용 검토’, ‘항목 적용 타당성 검토’, ‘세부기준 부재에 따른 검토율 적용’ 등으로 검토하였음.

□ 총 사업비(29.9억 원)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90.4% 수준인 27.04억 원으로 분석되었음.

- 「개최계획」에 나타난 총 사업비에 대한 원가조사 등을 통해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약 2.87억 원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요 비용 항목별로는 행사 경비가 2.2억 원 과다 산정되었으며, 그 외 비용 항목에서는 대체로 계획 대비 90%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비 적정성 분석 결과〉

(단위: 억 원)

항목	계획금액(A)	검토금액(B)	증감(B-A)	검토율(B/A)
행사 경비	20.79	18.59	-2.20	89.4%
행사기획 및 인건비	2.10	2.10	0.00	100.0%
일반관리비	1.83	1.66	-0.18	90.4%
기업이윤	2.47	2.23	-0.24	90.4%
부가가치세	2.72	2.46	-0.26	90.4%
총사업비	29.91	27.04	-2.87	90.4%

4. 결론

- 본 행사는 대체로 행사 개최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갖춘 행사로 평가되지만, 정책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높지 않았음.
- 따라서 주관기관은 전액 국비지원에 의존하여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취지에 부합하게 행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전문가 8인에 의한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정책성에 대한 최종평점은 77.74 점으로 도출되었음.

〈AHP 평가자 8인의 평가 결과〉

평가기준	배점	표준화점수	최종평점
행사 개최의 공익성	30	77.78	77.74
행사 계획의 우수성	30	76.35	
주관기관 등 관리역량 및 지역주민 여론	20	76.02	
국고지원 요구의 적절성	20	81.51	

주: 배점은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명시된 값이고 최종평점은 배점과 항목별 표준화점수와의 가중평균으로 산출

- 2025년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기관은 본 행사의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관기관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컨퍼런스와 전시관 구성을 조속히 확정하여 내실있는 행사 준비와 예산 절감을 모색
- 다양한 민간의 참여 및 스폰서 발굴 등을 통해 자체적인 수익을 확보
- 주관부처 중심의 행사 구성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프로그램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
- 전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료 및 방역체계,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사전에 수립

□ 또한 주관기관은 향후 연속행사로서의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염두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주관기관은 2023년 첫 개최에 이어 2024년과 2025년 행사를 추진하면서 얻게 될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행사 개최 주기(매년 또는 격년 행사)를 비롯해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운영을 구상할 필요